

전남 1급 발암물질 슬레이트 지붕 처리 '골머리'

24만 가구 육박...철거 10년 간 사업 추진율 10% 자부담에 사업 외면...도 "예산 확보로 대상 확대"

'1급 발암물질'로 관련 업계에서 퇴출된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이 아직도 전남지역에 산재해 관계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전남도는 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 지붕개량사업을 진행할 방

침이지만 자부담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매년 처리할 수 있는 사업량도 한계가 있어 전남지역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는데 50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

는 것 아니냐는 냉소도 나오고 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11년부터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올해까지 도내 2만 9,954동에 대해 철거 실적을 나타냈다. 하지만 도내 슬레이트 건축물 수는 전체 23만8,632동으로, 현재까지 사업 추진율은 10%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올해 사업비 109억 원을 확보해 소규모 창고, 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의 처리 지원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취약계층 지붕개량 등을 해 6,614동의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목표로 설정했다. 도는 또 정부의 지원 대상이 당초 '면적제한'에서 '건물당 지원'으로 개장돼, 실제 처리 사업량은 7,000동 이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붕개 선사업의 실제 수요자와 정부·지자체의 처리단가가 큰 괴리가 있어 현실적으로 열

마나 실효를 거두지는 미지수다. 현 제도상 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344만원·취약계층 지붕 개선 427만원·소 규모 축사 127만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이 같은 비용은 지붕공사에만 한정된 것으로, 인건비와 철거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별도 지원 없이 사업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더욱이 현재 슬레이트 건축물에서 주거 또는 농·축산 종사자 대부분은 차상위 계 층이어서, 생활보조금을 뛰어넘는 공사

자부담 비용에 사업 신청 자체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2030년까지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다는 환경부 목표도 회의적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30년 이상 걸릴 전체 슬레이트 지붕 철거기간을 단축하려면 관련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주택 위주였던 슬레이트 지붕 개선사업을 일반 건축물 까지 확대해 도민 혜택 범위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슬레이트 처리 사업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도민 주거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빛고를 장학재단 장학금 기탁식 이윤섭 광주시장이 10일 오후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재)빛고를 장학재단 대인기개발비전실협의회 장학금 기탁식에 참석해 최봉호 광주·전남도회 회장으로부터 장학금을 전달 받은 후 기념 촬영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수어통역서비스 갈등 해결 청신호

시의회·농아인협회등 관계기관 2차 간담회

광주시 수어통역서비스 운영과 관련한 갈등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광주시는 지난 1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광주시, 시의회, 농아인협회, 복지관, 수어통역서비스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2차 간담회에서 농아인협회는 수어통역서비스를 각 구 장애인복지관에서 제공하고 시의회와 시가 제시한 장애인복지관 안의 농아인 센터 제공을 장애인복지관이 아닌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 5개 자치구에 농아인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회적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수어통역사는 양질의 수어통역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아인협회 및 자부와 분리돼 운영되기를 바라며, 수어통역사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광주시와 시의회는 폐쇄 절차가 진행 중인 광주수어통역센터를 대체할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방안과 그동안 농아인들이 제기해 요구했던 농아인 센터 5개구 설치, 통역사에 대한 풀 인력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통역서비스 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수어통역기관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수어통역서비스 운영과 관련한 갈등은 지난 2014년 7월 수어통역센터를 1개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시작해 지난 2018년 3월 수어통역센터장 직무배제 요구로 촉발됐다. 시는 그동안 수십 차례의 면담과 중재를 실시했으나 양측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다. 급기야 지난해 10월 15일에는 수어통역센터 폐쇄의결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됐다. 이에 광주시와 박미정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은 관련 당사자들과 즐거운 면담과 설득을 통해 지난해 12월 1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1차 간담회 결과 지역 내 1만여 농아인

의 수어통역서비스의 지속적 제공방안 마련 필요와 농아인 센터설치, 농아인협회와 수어통역사간 소통과 양보를 통해 미래지향적 발전방안을 강구한다는 합의점을 도출했다. 특히 광주시, 시의회와 장애인 단체 간에 정례적인 간담회 개최 및 화합의 장 마련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주시, 시의회, 농아인협회장, 농아인지부대표, 수어통역사 대표, 장애인복지관협회장, 장애인종합지원센터장 각 1인으로 구성된 TF팀 결성이 제안됐고, 참석자 모두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TF팀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박미정 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은 "농아인들의 신속히 민원 해결을 위해 각 구 장애인복지관에서 수어통역서비스 제공에 따른 세부 사항과 농아인 센터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 TF팀 구성을 제안했다"며 "앞으로 TF팀에서 결정된 사항을 합의해 장기적 지속되어온 농아인의 불편함을 해소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광주 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하세요"

스마트농업·청년농업인 육성 등 32개소 모집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새로운 농사기술의 신속한 확산 및 농업 경쟁력 증진을 위해 2020년도 기술보급 시범사업 대상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2020년 시범사업은 ▲자유무역협정(FTA) 등 식량작물분야 3개 ▲스마트팜 환경 제어 기술 시범 등 원예·청년농업인 분야 2개 ▲드론 방제단 운영 지원 등 농기계 분야 1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사업 등 농촌자원분야 4개 등 총 10개로, 32개소에서 진행한다. 청년농업인들이 농촌의 주역으로 조기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청년농업인 육성 공모 시범사업'은 관내 만 40세 이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자율형 공모사업이다. /황애란 기자

사업은 자부담 비율을 기존 30%에서 10%로 대폭 완화해 청년농업인들이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시범사업장이 광주시이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농업인 및 단체다. 대상자는 타당성 검토 및 현지심사,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는 2월 10일까지 광주시농업기술센터 사업별 담당 부서 또는 지역농업인상담소에 사업별 필요 서류를 구비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사업 관련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gri.gwang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애란 기자

도, 토지거래 실태조사 결과 3건 적발 이행강제금 부과

전남도는 거래 허가 목적에 맞지 않게 토지를 이용한 3건을 적발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도내 6개 시·군 12개 토지거래허가구역 13.7km²에 대한 토지거래 실태조사를 지난해 말까지 6개월간 실시했다. 자가 상상을 노린 불법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취득허가를 한 55건 3만1,400m²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52건 2만8,300m²는 허가 목적에 맞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나머지 3건 3,100m²는 미이용 또는 허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남도는 미이용 건에 대해서는 목적에 맞게 이용하도록 이행 명령을 하고, 다른 목적 이용 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정애숙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 허가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했으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전남도, 농업인 '공익직불제' 안착 집중 올해 기존 6개 농업직불 통합 개편...권역별 설명회도

전남도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올해부터 처음으로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의 성공적인 안착에 온힘을 쏟고 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광주·전남 시군, 읍면동 등 지자체 직원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농업기술원, 전남 농협, 한국농어촌공사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누어 '공익직불제 권역별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농업소득보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공익직불제 추진 근거가 마련돼 시군, 읍면동 등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공익직불제 사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공익직불제는 정부의 핵심 농업정책이다. 기존 쌀 직불, 밭농업 직불, 조건불리 지역 직불 등 6개 농업직불을 통합 개편해 기본 직불제와 선택 직불제로 구분해 시행

한다. 기본 직불제는 영농 종사 기간, 농촌 거주 기간, 농외소득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면적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재배면적 구간별로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선택 직불제는 기존에 추진됐던 경관보전 직불과 친환경농업직불제가 그대로 유지되며, 기본 직불제와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광흥선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앞으로 농업인 단체 등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합리적 방향으로 공익직불제가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시, 상습 결빙구간 실태 점검...취약시간 순찰 강화

광주시가 종합건설본부·자치구 등과 공동으로 겨울철 도로 제설 실태를 점검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제설 대책의 적정성, 취약구간 제설 대책, 제설 장비 관리 등 위주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미흡

한 부분은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보완할 예정이다. 특히 상습 결빙(블랙 아이스) 지정 구간을 기존에 38곳에서 54곳으로 늘려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결빙 취약 시간인 오후 11시부터 이틀

날 오전 7시까지 순찰을 강화하고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예방 작업을 할 계획이다. 도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러 자동흡수 분사 장치를 설치하고 제설함을 추가 배치했다. 내비게이션 운영사와 협력, 운전자에게 실시간 주의와 경고를 할 수 있는 음성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황애란 기자

전남매일 연중 일자리 창출 캠페인

여러분의 취업성공, 활기찬 경제도시 남구가 함께합니다

남구
일자리박람회

607-2672

취업상담
및 알선

607-2675

남구
공공일자리

607-2673



남구 취업지원센터